

최신 노동뉴스

2026년 9월

노무법인 의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 053-719-2408

☎ 053-719-0019

- 차 례 -

【 고용분야 】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 방식 개선	1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 보고 의무 신설	2
3.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3
4. 고용허가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4
5.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5
6.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6
7. 병원 조직문화 개선 교육 영상 공개	7

【 감독분야 】

8.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8
9.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9
10. 건설·조선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10
11. 실노동시간 단축, 이제는 '지속·확산'	11

【 안전분야 】

12. 지게차 위에서 추락 사고	12
13. 제조업 고위험 기계·기구 집중점검	13
14. 천안시 공장 화재사고 긴급 대응	14
15. HD현대중공업 끼임 사망 사고 고강도 감독	15
16.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로 질식·추락사고 예방	16
17.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특별진단	17
18.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	18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 방식 개선

목표수익률 임금상승률 이상 설정, 듀레이션 연계 자산배분 투자 권장

DB형 비중	DB형 수익률	5년 수익률격차
45.7%	3.5%	-3.0%p
퇴직연금 적립금 중 DB형 비중	2025년 DB형 연간 수익률	DB형과 임금상승률 누적 차이

현황 및 문제점

- **DB형 적립금 편중** 2025년말 기준 501.4조원 중 228.9조원(45.7%)으로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 **원리금보장형 편중** 300인 이상 사업장 적립금운용계획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9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
- **수익률 저조** DB형 3.5% vs DC형 8.5%, IRP 9.4%로 타 제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익률 기록
- **누적 수익부족** 최근 5년 DB형 누적 수익률 15.9% < 누적 임금상승률 18.9%로 3.0%p 격차 발생

개선 방안 및 운용 전략

- **목표수익률 설정**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용자의 추가 적립금 납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
- **듀레이션 연계 전략** 퇴직급여 부채의 듀레이션(평균 7.1년)에 맞춰 자산 듀레이션 조정으로 할인율 변동 위험 완화
- **자산배분 다변화** 채권 중심에서 실적배당형과 원리금보장형 등 다양한 상품 조합으로 수익률 개선(모범사례: 5.9% → 25.5%)
- **퇴직연금사업자 자문**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 방안 등에 대해 사업자의 전문적 컨설팅 적극 활용

정부 지원 및 향후 계획

- **포상 및 감독** DB형 운용 모범 사업장·사업자 포상 추진, 2026년부터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정기감독 및 과태료 부과 계획
- **사업자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적 컨설팅 수행 독려, 2026년 10월 퇴직연금 가이드북에 DB형 운용 정보 포함 예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 보고 의무 신설

기금법인 탈퇴 후 3주 이내 행정청 보고 의무화, 근로자 복지 공백 방지

보고기한	시행시기	법령명
3주 이내 기금법인의 행정청 보고 의무	8월 25일 개정 시행령 적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고 의무 신설

개정 배경 및 현황

- **법적 의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또는 출연 의무
- **문제점** 탈퇴 사후 사내기금 설치 여부와 근로자 복지 공백 발생 여부를 적기에 파악할 절차 부재
- **필요성** 탈퇴 사업주의 법 이행 여부 확인 및 근로자 복지 보호를 위한 행정청 감시 체계 구축 필요

개정 내용 및 주요 개선사항

- **보고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중도 탈퇴하는 특정 사업자
- **보고 주체** 해당 기금법인이 탈퇴 사실을 행정청(고용노동부)에 통보
- **보고기한** 탈퇴 사실 발생 후 3주 이내 행정청 보고 의무
- **후속조치** 고용노동부가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을 독려하고 지도

시행 계획 및 문의

- **시행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빠르면 2026년 8월 25일 공포
- **문의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044-202-7761, 7766)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일→4일, 급여 상한 16만 8천원→33만 7천원

유급기간	급여상한	연간휴가
2일→4일 1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	168,420→336,840원 1일 기준 84,210→168,420원	최대 6일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제도 개선 내용

- **유급기간 확대**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되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급여상한 인상** 상한액이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인상되어 실질 지원 확대
- **불리한처우 금지**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벌칙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 **진단서 간소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 대체 가능(5월 시행)

휴가 범위 확대 및 신청 절차 개선

- **휴가범위확대** 시술 전 난임검사·배란유도, 시술 중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후 안정기·휴식기까지 포함
- **기업우수사례** 롯데쇼핑은 '가족계획 휴가'로 명칭 변경, 에코프로는 독립 결재시스템 운영,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공가 항목 신청 제공
-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 강화로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청절차간소화** 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 문서(전자문서 포함) 제출로 진행

향후 추진 계획 및 문의

- **가이드배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활용 가이드 배포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제공
- **담당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6, 044-202-7438)

고용허가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송출국 18개국으로 확대, 건설업 현장 간 이동 완화

송출국	도입 시기	건설현장 완화
18개국 카자흐스탄 추가로 확대	2028년 본격 도입 예정	사업주 단위 9월부터 적용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

- **지정 배경** 송출국 다변화, 산업현장 인력 도입 수요 대응, 양국 협력 강화
- **적격성 평가** 정부·공공기관의 송출 담당, EPS센터·취업교육·건강검진 인프라 확보, 불법체류 방지 협력의지 확인
- **중앙아시아 네트워크**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4개국 포함으로 협력 강화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

- **현장 간 이동 완화** 기존 공사종료·중단 시에만 허용에서 고용허가 요건 충족 시 허용으로 개선
- **고용제한 확대** 법 위반 발생 현장에만 제한되던 것을 동일 사업주의 전 현장으로 확대 적용
- **시행 일정** 현장 간 이동은 4회차 고용허가(9.14~9.29)부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 유예 후 2027년 3월부터 시행
- **기대 효과** 사업주 단위 인력 운용 원활화, 실효성 강화로 산업현장 구인난 해결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후속 조치** 카자흐스탄 현지 EPS센터 설치, 정부 간 MOU 체결 추진
- **정책 추진** 정책 변경 내용 홍보, 외국인력 체류지원 강화, 산재 예방 활동 병행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휴가 3종 지원세트 본격 시행

단기 휴직	배우자휴가	유산휴가
연 1회 1~2주 자녀돌봄 집중 필요시	20일 유급 출산 50일전~120일후	5일(3일유급) 우선지원기업 급여지급

추진 배경 및 개요

- **의결시기**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개정근거** 2026년 2월~3월 공포된 모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규정 마련
- **추진방향**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출산·돌봄 참여 확대 및 단기 양육수요 대응

주요 개정 내용

- **단기육아휴직** 2026.8.20. 시행, 자녀 휴원·휴교·방학·입원 등으로 집중돌봄 필요시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며 급여 지급 대상
- **배우자임신중휴직** 2026.9.18. 시행,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위험 시 휴직 허용,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
- **배우자출산휴가확대** 2026.9.18. 시행, 출산 후만 가능하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확대, 20일 유급휴가 부여
- **배우자유산휴가신설** 2026.9.18.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최초 3일 유급) 휴가 사용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 지급(상한 3일분 252,630원)

제도 강화 및 기대효과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 제외로 제도 강화, 일과 육아 병행 근로자 지원 확대
- **정책효과** 배우자 3종 지원세트 시행으로 남성의 임신·출산 전 과정 참여 촉진, 단기육아휴직으로 단기 돌봄수요 적시 대응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이름 부르기 캠페인으로 이주노동자 존중 문화 전국 확산

참석 인원	캠페인 진행	협력기관
150여 명 충남·대전 지역 기업·노동자	4개 지역 울산·광주·경북·충남	4개 재단 노동권익 향상 업무협약

추진 배경 및 개요

- **캠페인 목적** 현장의 관행적 호칭('야', '너') 대신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 확산을 통해 동등한 동료로서의 존중 및 포용적 일터 조성
- **협력 체계**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이 4월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
- **행사 개최** 2026년 8월 5일 충남 아산시에서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4개 노동권익재단 공동 개최

주요 내용 및 의미

- **안전모 전달** 이주노동자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터의 소중한 동료로 존중한다는 의미 전달
- **노사 공동선언** 충남 지역 노동자·사용자 단체가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안전한 일터,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노사 협력과 지속적 실천 다짐
- **이름 부르기의 의미** 호칭 변화를 통해 개인의 존재 인정, 노동자 존엄 존중, 동등한 동료 수용이라는 기본적 실천 실현
- **포용적 일터 구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공동체 조성 및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 의지 표현

향후 계획 및 문의

- **전국 확산** 울산(4월), 광주(5월), 경북 예천(6월)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캠페인 추진으로 노동존중 문화 확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국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 김진아 044-202-7152, 박성진 044-202-7150)

병원 조직문화 개선 교육 영상 공개

8월 31일부터 일터혁신 플랫폼서 누구나 무료 수강 가능

공개일시	제공형태	지원형식
2026.8.31.	무료	3단계
일터혁신 플랫폼 통한 대국민 공개	병원 종사자·국민 누구나 수강 가능	컨설팅·교육·매뉴얼 연계 지원

추진 배경 및 개요

- **정책근거**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공동협약 (8.13.) 후속조치
- **재단계획** 노사발전재단이 발표한 '병원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교육목표** 병원 종사자와 관리자가 의료기관 조직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실제 적용하도록 지원

주요 교육 내용

- **조직문화 특성** 의료기관 조직문화의 특성과 병원업종 현장 고유 특징 분석 및 조직진단 기준 안내
- **직장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사례·법령 해석 및 현장 예방·대응 매뉴얼과 고충처리 프로세스 구축방안
- **개선방안**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방안 등 실질적 변화 방안 제시
- **접근성**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에서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시청 가능**

향후 계획 및 문의

- **추가지원**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병원 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특별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표준매뉴얼** 연내 복지부·대한병원협회와 협업하여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 제작·공개 예정으로 컨설팅 미참여 의료기관도 자체 진단·개선 가능하도록 지원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9월 1~23일 4주간 8,000개소 사업장 전수감독 실시

점검 기간	점검 대상	대응 원칙
4주간 9.1~9.23	8,000개소 '25년 대비 2,000개소 증가	신속·선제·엄정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추진 배경 및 목표

- **추석 명절 앞두고** 명절 전 체불근로자가 없도록 하는 민생안정 최우선 정책
-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침 수립
- **점검 대상 확대** '25년 6,000개소에서 '26년 8,000개소로 2,000개소 증가

주요 추진 내용

- **집중 감독 대상** 임금체불 신고 반복 사업장,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 타깃
- **기관장 직접 개입** 고액 체불, 다수 피해, 분규 발생 사건의 현장 직접 방문 및 청산 지도
- **자발적 청산 지원** 경영 어려움 사업주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적극 안내
- **악의적 체불 대응**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향후 계획 및 기관 담당

- **지속적 점검** 일회성 지도가 아닌 예년보다 확대된 사업장 점검 계속 실시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연락처: 044-202-7553)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1차 감독에서 가장 높은 적발률 기록한 대전권역 재감독 실시

감독 대상	1차 적발률	미지급 규모
대전·청주 IT·R&D 지식서비스업체	43.0% 34개소/79개소 미지급	38백만원 A·B사 사례 합계

감독 개요 및 추진 배경

- **감독 시기** 2026년 8월 21일부터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5차 릴레이 감독 실시
- **추진 근거** 익명신고센터 제보와 1차 기획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다발 의심 지역 재감독
- **감독 배경** 2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1차 기획감독에서 대전청 관내 포괄임금으로 인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적발률이 가장 높음

1차 감독 주요 성과 및 적발 사례

- **감독 규모** 전국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 감독, 79개소에서 포괄임금 활용 확인
- **적발 현황** 대전청 관내 6개소 포함 전국 34개소에서 미지급 적발(대전·청주 각 2개소, 지식서비스 5개소)
- **A사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실제 근로시간 확인 없이 14명 근로자의 고정OT 초과분 25백만원 미지급
- **B사 사례** 연구개발업체에서 임금명세서 미기재 및 1명 근로자의 고정OT 초과분 13백만원 미지급

익명신고 제보 현황 및 향후 계획

- **제보 내용** 휴일근무 수당 축소·미지급, 고정OT 사업장의 평일 연장근로 추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로 일부만 인정 등
- **향후 방침** 대전·청주 지역의 포괄임금 활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 정착 추진

건설·조선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내년 1월 1일 시행, 다단계 도급사업 임금체불 예방

시행일	입법예고	업종 확대
2027.1.1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40일간 8.20~9.29 의견 수렴	건설·조선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

추진 배경 및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지난해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를 차단
- **제도 내용** 도급인이 매월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 지급하고, 수급인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지급받은 임금비용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 **적용 확대** 종전 공공분야 건설공사만 적용되던 제도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여 공공·민간 전체로 적용 범위 확대

업종별 적용 기준

- **건설업**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에 적용, 발주자직접지급제와 동일한 적용 범위로 추진
- **조선업** 선박건조·수리 목적 도급사업 중 선박 1척 기준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하되, 최초 500억원 이상에서 시작하여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간 단계적 확대
- **확인 방법** 도급인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 제출받아 확인,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시에도 임금구분지급 의무 이행으로 인정

향후 계획 및 문의

- **입법예고 기간**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현장의견 수렴 후 보완
- **부처 협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 임금구분지급 항목 추가, 시행 후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확대 업종 지속적 검토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실노동시간 단축, 이제는 '지속·확산'

워라밸+4.5 프로젝트 293개 기업 참여, 우수사례 공유로 현장 안착 추진

참여기업	직무만족도	근로시간
293개 목표 달성률 133.2%	85% 주 5일제 도입 후 매우만족	주 40시간 주 45시간에서 단축

추진 현황 및 목표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8월 12일 제8차 회의 개최, 주 4.5일제 등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안착 방안 논의
- **워라밸+4.5 프로젝트 확대** 2026년 7월말 기준 293개 기업이 참여(연초 목표 220개 대비 133.2% 달성)
- **정부 지원 확대**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예산 확보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추진 중

우수기업 사례 및 성과

-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교대제 개편으로 주 45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 직무만족도 85%, 산재 발생 제로 달성,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전년 대비 1.77점 상승
- **(주)에코월드팜** 주 4.5일제 도입 및 AI 활용으로 사무직 업무시간 주 648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단축, 신규 채용 3명 성공
- **인천연합병원** 주 2시간 자율 단축 근무 시행(총 63명 참여), 순환방식으로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향후 교대 근무자 확대 예정
- **IBK기업은행** 노사 협의로 수·금 조기퇴근제 시행(금융권 최초), 디지털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 유지, 신규 채용 추진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현장 중심의 해법 모색** 사업주의 인식 전환 유도, 인력 운영 효율화와 기술혁신 방안 제시,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기대효과 및 추진전략**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업무 프로세스 개선·불필요한 일 제거와 병행될 때 지속 가능, 다양한 우수사례를 토대로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

지게차 위에서 추락 사고

경기 김포 식자재 업체, 5m 추락 사고로 산안-노동 합동감독 즉시 개시

추락 높이	감독 유형	처리 원칙
5m	합동 기획감독	무관용 원칙
지게차 위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	산안-노동 부서 연합 감독	위법행위 적발시 관용없이 엄단

사건 개요 및 감독 착수

- **사건 내용**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건 발생(2026년 7월 30일 언론 보도)
- **감독 시작**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4일부터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즉시 착수
- **감독 대상**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철저히 조사

주요 조치 내용 및 방향

- **즉시 조치**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용없이 처리
- **구조적 개선**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문화 확인시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 지도
- **사업주 책임**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 조장에 대해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입장
- **안전의식 강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한 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감독

향후 계획 및 담당부서

- **감독 범위** 안전보건감독국, 근로감독정책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합동으로 실시
- **추진 방향** 김영훈 장관 주도하에 안전의식 제고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산업 안전 강화

제조업 고위험 기계·기구 집중점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사용 제조업 1,000개소 9월 1주간 집중점검

점검대상	점검기간	사망감소
1,000개소 제조업 사업장	9.7~9.11 1주간 집중점검	34명(11.8%)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추진 배경 및 개요

- **점검 필요성**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이용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음
- **점검 대상**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
- **점검 기간** 자율점검 기간(8.31~9.4) 후 집중점검 실시(9.7~9.11)

주요 점검 내용 및 추진 방식

- **점검 중점사항**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 **자율점검 운영**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점검표를 활용한 사전 점검 기간 운영(8.31~9.4)
- **현장 예방활동 강화** 지방관서장 49명의 불시점검,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지게차 안전지킴이 투입을 통한 상시 예방활동
- **법 위반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최근 사고사례 및 향후 계획

- **최근 사고사례**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짐(경남 김해, 6.1), 천장크레인으로 인양중인 부품에 맞음(전남 영암, 6.27), 컨베이어 구동축에 끼임(경기 용인, 6.8)
- **지속적 관리** 이번 집중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하여 상시적인 현장 예방활동 강화

천안시 공장 화재사고 긴급 대응

사망 3명·부상 1명, 노동부 현장 급파 긴급지시

사망자	부상자	전담수사팀
3명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	1명(중상) 중증 부상으로 응급 조치	15명 천안지청 즉시 구성

사고 개요

- **발생일시** 2026년 8월 28일(금) 11:44분경 추정
- **발생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제조업 공장
- **사고 내용** 공장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사망 3명, 부상 1명(중상)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 **조직 구성**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 즉시 구성,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 급파
- **현장 대응** 천안지청장 및 노동감독관 출동, 해당 작업에 대한 즉시 작업중지 조치 실시
- **수사 체계** 천안지청 내 전담수사팀 15명 즉각 구성,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수사 추진
- **사고 규명**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2차 사고 예방에 총력

HD현대중공업 끼임 사망 사고 고강도 감독

1주일 내 사망 사고 2건 발생, 감독관 62명 투입한 특별감독 실시

감독인원	사고발생	감독대상
62명	2건	5개소
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	울산·군산 조선소, 본사, 공장 등

감독 추진 배경

- **반복적 재해** HD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주일 사이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2건 추가로 발생
- **특단의 조치** 고용노동부가 동일 유형 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엄단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 실시
- **감독 착수일** 2026년 8월 18일(화)부터 감독 개시

고강도 감독 주요 내용

- **감독 규모** 관할 지청 외에 지방청까지 확대 편성하여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62명의 대규모 감독반 투입
- **감독 대상** 울산·군산 조선소를 비롯한 본사, 20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 등 전사적 감독 실시
- **점검 범위** 끼임·부딪힘·추락·화재·폭발·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집중 감독
- **관리체계 점검** 사고 이후 개선조치 실제 이행 여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위험성 평가 실효성 등 점검

향후 조치 계획

- **즉시 사법처리**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 **강력 지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강력히 지도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로 질식·추락사고 예방

공단, 224개 지방정부·공기업에 배포하여 공공 현장 안전 강화

최근 사망	배포 대상	사고 유형
5명 작년 7월 인천·서울·상하수도	224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3가지 질식·추락·2차재해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반복되는 사고** 작년 7월 인천·서울·상하수도 맨홀에서 5명 사망, 올해 6월 전북·인천 하수도에서 6명 부상 발생
- **공공 현장 집중**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발주 현장에서 맨홀 사고 빈번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 **대응 강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질식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맨홀작업 안전가이드 제작·배포

주요 내용 및 특징

- **사고 유형 분석**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인한 호흡곤란 후 추락, 사다리에서 발 헛디딤으로 인한 질식·추락 연쇄사고, 동료 구조 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 재해
- **단계별 안전 방법**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핵심 기술 설명**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송기 마스크 착용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 설명
- **추락·구조 대책** 구조용 삼각대 사용으로 출입 시 추락 예방, 비상상황 발생 시 맨홀 밖에서 안전하고 빠른 구출 방법 제시

향후 계획 및 문의

- **배포 및 활용** 224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공공 발주 상·하수도 맨홀작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 추진
- **접근성 강화** 해당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대표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제공 중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특별진단

노사발전재단-대한병원협회 협약, 병원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협약 기관	진단 방식	시행일
2개 노사발전재단·대한병원협회	특별진단 의료기관 맞춤형 괴롭힘 문화 진단	8월 3일 2026년부터 특화 컨설팅 운영

추진 배경 및 협약 개요

- **협약 체결** 노사발전재단과 대한병원협회가 8월 13일 병원 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공동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
- **목표** 의료 현장의 조직문화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터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주요 지원 내용 및 특징

- **병원 패스트트랙** 대한병원협회 추천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 필수 제공, 자부담 면제
- **특별진단 의무화** 간호사 대상 상호존중 문화, 심리적 안전,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위험, 신고·보호체계 종합 진단
- **맞춤형 컨설팅** 특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 근로자 보호체계, 노사파트너십 증진 등 맞춤형 솔루션 제공
- **협력 내용** 조직문화 진단·컨설팅, 일터혁신 홍보, 병원 맞춤형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등 3개 분야 협력

후속 지원 계획 및 문의

- **교육 강화** 컨설팅 미참여 의료기관도 언제든지 교육 가능하도록 보건업 특화 교육 동영상 제작·게시, 조직문화 개선 매뉴얼 제작
- **담당부서**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02-6021-1006, 02-6021-1221)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

정부·병원·간호계 손잡고 의료종사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괴롭힘 경험률	신고사건 비율	협약기관
보건·복지 25% 타 업종 대비 가장 높음	해당분야 16% '25년 직장 내 괴롭힘	6개 기관 정부·병원·간호·교육기관

추진 배경 및 협약 개요

- **추진배경** 최근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의료종사자가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높아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
- **협약 체결** 2026년 8월 13일 인하대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 **협의체 구성** 협약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별 정기 개최 및 이행상황 점검

주요 추진 과제

- **현황 파악**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간호인력 대상 인권침해 실태 및 처우개선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조직문화 개선** 병원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집중 지원, 대한병원협회 추천 병원의 패스트트랙 운영, 저연차 간호사 대상 괴롭힘 맞춤형 특별진단 및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 제작
- **근무환경 개선** '위라벨+4.5 프로젝트'를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 **대응체계 구축** 간호사 SOS 지원창구를 통한 상담·지원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대한간호협회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연계 방안 마련, 현장 문제사업장 정보 공유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기관별 역할**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제1차 간호종합계획 수립, 고용노동부는 병원업종 특화 진단·컨설팅·교육 종합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장려
- **성과사례** 삼육부산병원은 수년 전 컨설팅 참여로 간호사 근무체계 개편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이직률 대폭 감소 달성